

2024학년도 10월 정경대학 다람쥐 모의평가 정답 및 해설

• 사회탐구 영역 •

정치와 법 정답

1	④	2	②	3	②	4	①	5	④
6	①	7	②	8	④	9	③	10	①
11	③	12	④	13	①	14	③	15	⑤
16	④	17	⑤	18	②	19	④	20	⑤

해설

1. [출제요소]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학급의 규칙을 정하는 회의와 국회의 법률 입법을 위한 회의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는 A는 좁은 의미의 정치,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이해하는 B는 넓은 의미의 정치이다.

(가)에는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의 공통점이 들어가야 한다.

[해설] ①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 집단과 구분되는 특수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② 넓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 현상만을 정치로 보지 않으므로, 국가의 존재가 없더라도 정치 현상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③ 시민 단체의 대표자 선출 과정은 좁은 의미의 정치와 달리 넓은 의미의 정치가 정치로 보는 사례이다. ④ 사회적 희소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가 모두 정치로 인정하는 정치의 의미이다. 따라서 (가)에 해당 내용은 들어갈 수 있다. ⑤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거치는 과정은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 모두 정치로 인정하는 정치의 의미이다. 따라서 (가)에 해당 내용은 들어갈 수 있다.

2. [출제요소] 헌법의 기본 원리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한다는 헌법 전문의 내용은 우리 헌법이 국제 평화주의를 천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이다. 따라서 A는 국제 평화주의이다.

[해설] ① 국민 주권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② 국제 평화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③ 복지 국가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④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⑤ 문화 국가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3. [출제요소] 법치주의

갑의 관점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법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이라면, 내용과 관계없이 법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므로, 형식적 법치주의의 관점이다. 을의 관점은 입법자가 법 제정 절차에서 해당 법이 규율하는 내용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관점이다.

[해설] ① 두 관점은 모두 법의 보호라는 형법의 보호적 기능을 인정한다. ②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달리 합법적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이라도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③ 실질적 법치주의는 위헌 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④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모든 국가 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⑤ 실질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형식적 합법성과 함께 실질적 정당성으로 함께 강조한다. 반면, 형식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형식적 합법성과 달리 실질적 정당성은 강조하지 않는다.

4. [출제요소]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

행정부 수반이 의회에 의해 선출된다는 점에서 A의 요소를 가진다고 하였으므로 A는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국가 원수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는 점에서 B와 유사하다고 하였으므로 B는 전형적인 대통령제를 알 수 있다.

[해설] ① 제시문에 따르면 의원 집정부제에서 국가 원수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의회가 국가 원수에 대한 불신임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의원 정부제에서 국가 원수의 임기는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② 제시문에 따르면 의원 집정부제에서 의회는 행정부 수반에 대하여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하여 견제할 수 있다. 따라서 의회의 행정부 수반에 대한 견제 수단이 없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③ 제시문에 따르면, 의원 집정부제에서 국가 원수는 국가적 비상사태의 발생 시 행정권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시문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 다만,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함과 별개로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서로 다른 인물이므로,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와 동일하지 않다. ④ 제시문에 따르면 의원 집정부제에서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은 서로 다른 인물이다. 다만,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같은 인물이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동일하지 않다. ⑤ 의원 집정부제에 따르면 국가 원수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행정부 수반은 의회에 의해 선출된다. 이때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 원수의 소속 정당과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을 배출하는 정당이 서로 동일한 경우, 국가 원수 소속 정당과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은 동일할 수 있다.

5. [출제요소] 국가 기관의 종합적 이해

국무회의의 의장인 A는 대통령이다.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법률안을 제출하는 B는 국회의원이다. 본회의에서 법률안을 의결하는 C는 국회이다.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담당하는 D는 대법원이다.

[해설] ① 대통령은 사면권을 행사하기 위해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명하는 권한은 국회의 동의 없이 행사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된 회기 내에서는 다시 의결될 수 없다(일사부재의의 원칙). ④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아닌 일반 법관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 없이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거쳐 임명할 수 있다. ⑤ 대통령 및 국회의원과 달리 대법원의 구성원(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은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정당에 소속될 수 없다.

6. [출제요소] 정치 참여 집단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특수 이익 실현을 위해 결성한 집단인 A는 이익 집단이다. 선거에 공약을 제시하는 B는 정당이다.

[해설] ① 이익 집단의 활동은 공익보다 특수 이익을 중시하므로, 사회 전체의 이익(공익)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② 정당은 정치적 강령과 정치적 성향을 바탕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는 데에 목적을 두므로, 정치적 중립을 본질적 특성으로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③ 정당은 이익 집단과 달리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함으로써 정치 엘리트의 충원 기능을 수행한다. ④ 이익 집단과 정당은 모두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⑤ 정당은 이익 집단과 달리 당정 협의회를 통해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7. [출제요소] 지방 자치 제도의 이해

지방 자치 단체의 집행 기관인 A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다. 지방 자치 단체의 의결 기관인 B는 지방 의회이다.

[해설] ㄱ.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지방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가지는 것은 대통령이 국회의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가지는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에 해당한다. ㄴ. 주민 소환 제도를 통해 지방 의회의 의회 의원을 해임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해임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국가 단위보다 더 넓게 보장한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달리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ㄷ. 광역 자치 단체 소속인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의 행정 사무 집행은 광역 자치 단체에 소속된 기초 자치 단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ㄹ. 기초 자치 단체 소속인 지방 의회의 지역구 의원은 중선거구제로 선출된다.

8. [출제요소] 기본권의 종류와 유형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는 제시된 세 기본권 중 청구권에만 해당한다. 이때 A와 B는 해당 질문으로 구분되지 않으므로, C는 청구권으로 확정된다.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을 방어적 권리’는 자유권으로, C가 청구권으로 확정되는 상황에서 B와 C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B는 자유권으로 확정되며, A는 사회권으로 확정된다.

갑은 A를 재판 청구권을 포함하는 청구권으로 이해하고 있다. 을은 B와 달리 C가 신체의 자유를 포함하는 권리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C를 자유권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병은 A와 B는 모두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등장한 권리라고 하였는데,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등장한 권리는 사회권이므로 A, B를 모두 사회권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설] ①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하는 권리로, 청구권은 이러한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권리는 평등권으로, 사회권은 이러한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자유권은 본질적 권리이다. 그러나, 모든 기본권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다. ④ 갑, 을, 병의 진술은 모두 옳지 않다. ⑤ 을의 진술을 통해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을이 C를 자유권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권리는 사회권으로, 을이 B에 대하여 사회권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제시된 진술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9. [출제요소] 사법부와 헌법 재판소

보호 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담당하며,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는 A는 법원(행정 법원)이다. 위헌 법률 심판을 담당하는 B는 헌법 재판소이다.

(가)는 갑이 제청 신청을 하고, 법원이 제청하는 위헌 법률 심판이다.

[해설] ① 법원은 ○○법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위헌 법률 심판을 헌법 재판소에 제청하였을 것이다. ② 헌법 재판소는 ○○법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인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통제하는 것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통제하는 것 자체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③ 헌법 재판소는 ○○법 해당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갑에 대해 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 해당 조항은 해당 재판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④ 법원과 달리 헌법 재판소는 정부가 제소하는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⑤ 헌법 재판소는 탄핵 심판권을 가지는 것으로, 탄핵 소추권은 국회가 가진다.

10. [출제요소] 민법의 기본 원리

사례에서 갑이 제조한 제조물로 나타난 피해이므로 제조물 책임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제조한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므로 제조물 책임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한편, 해당 부작용을 명시하지 않은 갑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을이 해당 재판에서 승소하였으므로, 을이 승소한 근거가 되는 민법의 기본 원칙은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해설] ① 과실 책임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② 소유권 공공부리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③ 계약 공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④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⑤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11. [출제요소] 가족 관계의 종합적 이해

[해설] ① A가 태어난 시점에서 갑이 사실혼 관계 중 인지한 점을 통해, 갑과 을의 혼인 관계가 사실혼임을 알 수 있다. 법률혼 관계와 달리 사실혼 관계에서는 민법상 성년자가 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② 갑은 을과의 혼인에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혼인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실혼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만, 사실혼의 해소도 혼인의 해소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을 의미하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A는 을, 정에게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되었으므로, 갑과 A 간의 친자 관계가 유지된다. 이때, 만약 A가 미성년 자녀인 경우 갑과 A 간의 상호 면접 교섭권이 인정된다. 다만, A가 입양된 시점에서 A는 성년자인데, 면접 교섭권은 미성년자인 자녀와 부 또는 모 등 사이에 인정되는 권리로, 성년자인 A에 대한 갑의 면접 교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A가 성년자인 시점에서 A가 입양되었으므로, A보다 먼저 태어난 C는 A가 입양된 시점에서 성년자임을 알 수 있다. 이때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가지는 권리이므로, 을과 정은 C에 대해 친권을 가지지 않는다. ⑤ 갑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A는 갑에게 인지되었으므로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되어 갑과 A 간의 친자 관계가 존속된다. 따라서 이 경우 A는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12. [출제요소] 죄형 법정주의와 범죄 성립 요건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써 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형법의 대원칙 (가)는 죄형 법정주의이다.

A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구성 요건이다. B는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의미하는 책임이다. C는 범죄사 전체의 관점에서 어긋나느냐를 따지는 위법성이다.

[해설] ① 죄형 법정주의는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형법 모두에 적용된다. ② 죄형 법정주의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파생 원칙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는 행위 시 '판례'를 신뢰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행위 시 '법률'을 신뢰한 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경찰관이 현행범을 제압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폭행한 것은 구성 요건에 해당하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이다. ④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를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2023학년도 대수능 5번) ⑤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위법성과 책임이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13. [출제요소]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제도

[해설] ① 체포 영장 발부의 예외 사유(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행위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 ② 국민 참여 재판은 피고인의 청구로서 개시되는 것

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국민 참여 재판의 배심원이 될 수 있는 자는 20세 이상의 일반 국민으로, 민법상 성년인 19세 일반 국민은 국민 참여 재판의 배심원이 될 수 없다. ④ 갑은 1심 법원에서 징역을 선고받았다. 징역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형으로서, 구류 및 금고와 달리 정역을 부과하는 형벌이다. ⑤ 국민 참여 재판은 형사 사건의 1심에서 진행될 수 있는 재판의 유형이다. 따라서 갑이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 불복한다고 하여 2심도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14. [출제요소] 민법상 책임과 형법상 책임의 이해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는 A는 범죄 성립 요건상 책임이다.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준인 B는 민법상 책임(책임 능력)이다.

[해설] ㄱ.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도 형법상 책임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ㄴ. 민법상 책임 여부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므로, 같은 연령의 행위자라 하더라도 그 판단 여부가 다를 수 있다. ㄷ. 형법상 책임은 행위가 아닌 행위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5~16] 계약과 불법 행위의 종합적 이해

15. [출제요소] 계약의 종합적 이해

갑, 병은 을에게 전자기기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을은 정에게 대규모 전자기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해설] ① 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을과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갑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을과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해당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따라서 을은 갑의 법정 대리인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한편, 확답 촉구는 미성년자가 아닌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 ③ 정에게 고용된 A는 갑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A는 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정은 갑, 병과의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정은 갑과 병 모두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을은 병에게 판매한 제품 중 일부를 망가진 제품을 판매하였다. 계약의 일부 불이행 또한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을은 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한편, 병은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16. [출제요소] 불법 행위의 종합적 이해

[해설] ㄱ. 갑의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갑의 법정 대리인은 을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의 유형 중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질 수 있다. ㄴ. 갑의 책임 능력이 인정될 때 갑의 법정 대리인이 갑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갑의 법정 대리인은 을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미성년자의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 지는 특수 불법 행위와 일반 불법 행위 모두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 면책된다.) ㄷ. 갑과 병이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을을 폭행하였다. 해당 폭행 행위는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가해행위,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책임 능력) 중 조각되는 사유가 없다. 따라서 병은 을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ㄹ. 을의 A에 대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은, 을이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 소유자인 B는 2차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지며, 공작물로 인한 손해를 을과 A 모두 받았으므로, 공작물의 소유자인 B는 을과 A 모두에 대하여 무과실 책임을 진다.

17. [출제요소] 근로자의 구제 절차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에 대한 해고가 업무 태만이 이유임을 인정하였으나, 갑, 을에 대한 해고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구제를 명령하였다. 이에 대하여 A 회사와 갑, 을 모두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므로,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의 부당 노동 행위를 이유로 한 구제 신청은 기각하였으나, 부당 해고를 이유로 한 구제 신청은 인용하였을 것이다.

중앙 노동 위원회 재심 결정에 A 회사가 불복하였으므로, 중앙 노동 위원회가 갑의 부당 노동 행위 또는 부당 해고 중 하나 또는 두 가지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을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중앙 노동 위원회가 을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A 회사와 을 모두 행정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으므로, 행정 법원은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 노동 행위 또는 부당 해고 중 하나 또는 두 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며, 을에 대한 해고는 부당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Q. 중앙 노동 위원회와 행정 법원의 갑에 관련한 판단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중앙 노동 위원회에서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편을, 부당 해고에 대하여 갑의 편을 들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갑이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중앙 노동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에 대한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 모두에 대하여 중앙 노동 위원회의 편을 들었다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 법원 또한 중앙 노동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것만을 대상으로 판단하므로, 두 가지 모두를 판단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설] ① 갑을 대상으로 한 A 회사의 부당 해고 여부에 대하여 지방 노동 위원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행정 법원에서는 갑에 대한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 중 어떠한 것이 인정된다고 보았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 (위 해설 참고) 따라서 갑을 대상으로 한 A 회사의 부당 노동 행위 여부에 대한 지방 노동 위원회와 행정 법원의 판단이 같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② 행정 법원은 갑에 대한 부당 해고 또는 부당 노동 행위 중 적어도 하나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갑은 행정 법원의 판결로 인해 구제되고 갑은 사업장에 복귀할 수 있다. 다만, 행정 법원의 판결이 갑에 대한 해고가 A 회사의 부당 노동 행위인 것을 이유로 한 것인지는 제시문을 통해 단정을 지을 수 없다. ③ 을이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는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이다. 따라서 해고의 효력이 없음을 다투는 소는 아니다. ④ A 회사를 피고로 하는 민사 소송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로, 이는 노동 위원회의 구제 절차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에서 A 회사를 피고로 하는 해고 무효 확인의 소(민사 소송)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을은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비상교육 p.164)

18. [출제요소]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고, 자국의 안보를 통해 힘의 우위를 확보한다고 이해하는 갑의 관점은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서술형 1〉의 첫 번째 답안은 현실주의의 관점이 긍정하라는 내용이므로, 해당 답을 통해 1점을 획득한다. 해당 문항 전체의 채점 결과가 1점이므로, (가)에는 현실주의적 관점이 긍정하지 않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서술형 2〉의 답안을 채점한 결과가 1점이므로, (나)에는 현실주의적 관점이 받는 비판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해설〕 ① 현실주의적 관점은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조화될 수 없다고 본다. 이는 현실주의적 관점이 긍정하라는 내용이므로, (가)에 해당 내용은 들어갈 수 없다. ② 집단 안보 체제를 국제 평화의 실현 방안으로 보는 것은 현실주의적 관점이 아닌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따라서 (가)에 해당 내용은 들어갈 수 있다. ③ 현실주의적 관점은 복잡하고 다변화된 국제 사회를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따라서 (나)에 해당 내용은 들어갈 수 있다. ④ 현실주의적 관점과 자유주의적 관점은 모두 국제 사회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⑤ 국제 관계에서 국제법이 국제 사회의 분쟁 해결을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은 현실주의적 관점이 아닌 자유주의적 관점에 대한 설명이다.

19. [출제요소] 국제법의 법원(法源)

국가 간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 일정한 행위 여부에 대하여 문서로써 합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A는 조약이다. 다수의 국제법 주체들이 최소한 지켜야 한다고 생각되는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규범이 국제 사회의 법원(法源)으로 인정받은 것을 의미하는 B는 국제 관습법이다.

〔해설〕 ① 모든 국제법의 법원(法源)은 강제적으로 집행할 국제기구 또는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안전 보장 이사회가 경제적 또는 군사적으로 이를 제재할 뿐이다. ② 모든 국제법의 법원(法源)은 우리나라에서 헌법 하위의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③ 국제 사회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인정하여 국내법에 반영하고 있는 행위 원칙은 법의 일반 원칙으로, 이는 국제 관습법과 조약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모두가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와 선지와 같은 설명은 구분되어야 한다. -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19번) ④ 체결하고자 하는 조약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2024학년도 수능특강). 따라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⑤ 국제 관습법을 성문화하여 체결된 조약은 체결한 당사국 또는 국제기구 간에만 구속력이 발생한다.

20. [출제요소] 선거 제도 분석

1) 현행
현행의 경우 두 개의 광역 지방 행정 구역으로 구분한 후, 각 광역 지방 행정 구역별로 4개의 소선거구를 두어 각 광역 지방 행정 구역에서 지역구 의원을 각각 4명 선출하는 제도이다. 이와 더불어 비례 대표 제도를 두어 전국구로 하는 비례 대표 의원을 8명 선출하고 있다.
2) <1안>
<1안>의 경우 A, B 두 개의 광역 지방 행정 구역을 선거구별로 4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권역별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전국구로 하는 비례 대표제는 두고 있지 않다.
3) <2안>
<2안>의 경우 현재의 선거구를 2개씩 통합하며 한 선거구당 2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동시에 각 선거구에 최대 2명을 선출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편, 비례 대표 의원은 선출하지 않는다.

〔해설〕 ㄱ. 현행에서 지역구에서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은 후보자의 소속 정당에 투표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무소속 의원에게 투표권을 행사한 사람은 정당 투표에 기여하지 못하므로,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선거 제도의 문제점으로 '개별 유권자가 비례 대표 의원 선출에 행사하는 영향력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ㄴ. <1안>의 경우 정당이 비례 대표 명부를 정하는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통해 비례 대표 의원을 선출한다. 따라서 유권자가 원하지 않는 후보자의 비례 대표 당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ㄷ. <2안>은 선거구당 2인을 선출하면서 각 정당이 최대 2인을 공천할 수 있는 제도이다. 만약 특정 정당이 모든 선거구에서 2인 당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정당이 지역구 의석을 모두 차지할 수 있으므로, <2안>에서 특정 정당은 의회 의석의 5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 ㄹ. <1안>은 현행 비례 대표 선출 방식에 비해 비례 대표를 선출하는 구역이 작다. 이로 인하여 지역 대표성을 갖춘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 검토진의 정치와 법 수험생분들께 드리는 말

전반적으로 난도가 있었던 시험인 것은 맞지만, 평가원과 유사한 논리 구조를 갖추었으며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면 틀릴 만한 매력적인 오답도 있었던 만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하기에는 더 없이 좋은 하나의 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문항을 맞추었다면 혹시 나의 논리 구조가 잘못되었는데도 소위 '찍은 것이나 다름 없게' 맞춘 것은 아닌지 점검해보고, 틀렸다면 '차라리 지 금 틀린 것이 낫다'라는 심정으로 어떤 부분에서 나의 취약점이 발견되었는지를 확인해보며 공백을 조금씩 메꾸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빛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4학년도 10월 정경대학 다람쥐 모의평가' 검토진 드림.

○ 출제진의 정치와 법 수험생분들께 드리는 말

안녕하세요, 정경대학 다람쥐 모의평가의 저자 윤준수(한국고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입니다. 일단 수능 대비를 위해 한 세트를 열심히 풀어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평은 출제 방향에 상세히 담아놓도록 할 테니, 여기에서는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을 담고자 합니다.

시기마다 이름은 달랐으나, 벌써 오르비에서 배포하는 9번째 정치와 법 모의고사입니다. 처음으로 수능 정치와 법을 대비하기 위해 모의고사를 만들어 배포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모두 힘든 상황에서 제 본업과 학업, 그리고 자료 배포 활동까지 병행을 하다 보니 정말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배포 활동을 놓고 본업에만 집중하고 싶은 생각하는 때도 있었는데, 처음 오르비에서의 마음가짐과 저를 지금의 위치에 있게 만들어준 감사함을 가지며, 끝내 견뎌 이번 모의고사까지 배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저의 배포 활동을 성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힘든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이 힘든 시기, 잘 견뎌내고 성장하는 여러분이 형 혹은 오빠, 동생, 친구로서 정말로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힘든 시기를 몰입으로써 견뎌온 여러분은, 수능이 끝난 후 돌이켜 볼 때 조금 더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수능에 오래 머무는 것이 자신의 정신적 성장을 방해하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적어도 누구보다 몰입한 여러분에게는 분명 좋은 경험과 성장의 계기로 남을 것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대학, 그리고 취직을 해서는 더 많은 사람과 다양한 경험을 쌓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쪽일 수도 있고 나쁜 쪽일 수도 있지만, 어떠한 경험이든지 지금보다는 힘든 경험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에 가장 힘들고 외로웠던 경험을 한 기억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힘든 시기를 잘 헤쳐나가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귀중한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여 여러분이 외롭다고 하시더라도, 여러분을 덜 외롭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매년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해당 모의고사가 정치와 법 콘텐츠에 대한 여러분의 갈증과 더불어, 여러분의 희망찬 미래에 이바지할 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인사는 이번 모의평가의 필적 확인란을 엮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날을 위하여'
그것이 외롭고 고단한 길이라고 하더라도
헤쳐나가는 본인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더 큰 세상에서 존재감을 빛내는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정경대학 다람쥐로 활동 중인 저 윤준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